

주간 통일정세

2016-09

Contents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2. 대내 정치
3. 경제
4.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주러 北 대사 “핵무기 포기하려면 국가안보 보장해야”(3/3, 스푸트니크방송)
 - 김형준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는 “(핵무기)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이 방법이 우리 국가안보를 보장해준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방송이 3일 일간지 ‘트루드’를 인용해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김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채택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핵무기 포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대북 강경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포기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그는 또 “우리는 쉽 없이 계속해 핵제어력(억제력)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北, 한미훈련에 “전쟁 터지면 책임 미국이 져야” 위협(3/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7일 시작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이 조선반도에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위협함.
 - 외무성 대변인은 6일 담화를 통해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위협도수를 최대한 높이면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어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 땅덩어리를 마음대로 두들겨팥 수 있는 최첨단 공격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며 강위력한 주체탄, 통일탄을 쏠 수 있는 무기들을 부단히 개발 완성해 실전 배비(배치)하고 있다”며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은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관영매체, ‘안보리 결의’에 첫 공식 반응…“엄중한 도전”(2/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으로 몰아대면서 그 무슨 국제적 압력과 ‘제재’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백악관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 발로”라고 주장함.
 - 통신은 이어 “저들의 위성 발사는 모두 합법적이고 우리가 하는 위성 발사는 모두 불법이라고 떠드는 강도적 논리는 그야말로 미국식 이중 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함.
 - 또한 통신은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 우리 지위는 미국이 부정한다고 하여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공화국의 우주개발사업은 누가 ‘제재’한다고 하여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민족의 자존심과 존엄을 걸고 우주개발분야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함.

- **북, ‘해외 근로자 임금 핵개발 전용’ 주장 반박(3/1,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1일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함.
 - 우리민족끼리TV는 1일 ‘해외 건설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인권 모략극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에서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해외 근로자들이 얻어들이는 수입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매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하루 20시간씩 일한다’는 등의 실상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황한 거짓 여론을 내돌렸다”며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北, 단거리발사체 6발 동해로 발사…유엔제재 반발(3/3, 연합뉴스)**
 - 북한이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은 오늘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 100~15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음.
- 단거리 발사체의 정확한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KN-01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이거나 300mm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스는 전함.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러 요구로 안보리 결의안 수정…北민항기 해외급유는 허용”(3/2, NHK, 교도통신)
 -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2일 보도함.
 - 최종 결의안에 의하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고 매체는 보도함.
 - 또한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으며, 리스트에서 삭제된 간부는 북한-러시아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매체는 전함.

아. 국제기구

- **대북 제재결의안 3일 0시 표결…‘北 자금줄’ 전방위 차단(3/2,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고자 마련한 대북 제재결의안의 채택을 하루 연기했다고 연합뉴스는 2일 보도함.
 - 안보리는 당초 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로 순연했으며, 이에 대해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 회의 개최 일자가 절차적 이유로 2일 오전 10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리수용 “북 인권 공격 회의들에 더 참가 안 할 것”(3/2, 연합뉴스)**
 - 북한의 리수용 외상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회의들에서 어떤 결의가 채택되든 그것은 불공정성과 이중기준의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리 외상은 2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의) 막강한 핵억제력과 군사력으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미국 등이)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북한을 적대시하며 불순한 정치목적에 인권문제를 도용하려는 나라나 개인은 상대 자체를 하지 않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함.

-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3/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뉴스는 보도함.
 - 또한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안보리에 배포”(3/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달 발표한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중대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것이다’가 3일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A/70/760-S/2016/179호’로 배포됐다”고 전함.

자. 기타 국가

■ 北-라오스 공안당국 “상호 협조”...탈북자 관련 합의 가능성(3/6, 조선중앙통신)

-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보안부가 라오스의 안전보위성과 ‘상호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밝힘.
- 통신은 최부일 인민보안부장과 라오스 안전보위상이 지난 4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회담을 했다면서 “인민보안부와 안전보위성 사이의 호상(상호)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합의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는 않은 채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협조를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만 전함.

- [北역류 美 대학생(오토 웬비어, 21세) 기자회견(2.29)]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하였다’며 ‘美 행정부가 주장하는 北인권문제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구실’이라는 주장과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와 용서를 받았다’고 강조(2.29, 중앙통신)

- 박봉주 내각총리, 2월 29일 코트디부아르 수상 당선자(다니엘 까블랑 둔강)에게 축전(2.29,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정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식량 기증(3.1, 중앙통신)

- 최태복(당 중앙위 비서), 3월 1일 유럽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 대표단(단장 : 조나단 포웰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과 담화(3.1, 중앙통신·중앙방송)

- 몽골 외무성 대표단(단장 : 그.바트통갈라그 국장), 3월 1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연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3.1,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의 사드 배치 필요성(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언급(내각 관방장관 등) 및 움직임에 대해 “야심적인 군사대국화 책동의 정당화·합법화”라며 “일본이 재침의 길에 나선다면 파멸의 무덤뿐”이라고 경고(3.2, 중앙통신·노동신문)
- 「3.1절」 관련 ‘일본의 과거 반인륜적 범죄 부정·왜곡’은 “도덕적 저열아들의 속된 근성”으로 “역사는 결코 세월이 흐른다고 사라지거나 퇴색되지 않는다”고 ‘사죄와 배상’ 촉구(3.2,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월 2일 알제리 대통령(아브델아지즈 부테플리)에게 생일 축전(3.2,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직총」 대표단(단장: 김동선 부위원장), 3월 2일 베트남(세계직업연맹 위원장 이사회 회의 참가)과 말레이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3.2, 중앙통신·중앙방송)
- 유럽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 대표단, 3월 2일 과학기술전당 및 미래과학자거리 참관(3.2, 중앙통신·중앙방송)
- 외국 선박선원들, 3월 2일 청진항에서 ‘김정은의 신년사 제시 조국통일방안 지지 성원’ 연대성 집회 진행(3.2,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3월 3일 시리아 대통령에게 ‘3월8일혁명’ 53돌 즈음 축전(3.3, 중앙통신)
- ‘미국이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어떻게든 강행할 구실을 찾기 위해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격화어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드는 조선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였으며 군사적으로 포위하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3.3,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정부 대변인 성명(3.4)】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관련 ‘단호한 대응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며 ‘우리(北)의 대응에는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 될 것’이라고 위협(3.4,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월 4일 가나 독립 59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3.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인민보안부 대표단(최부일 부장)-라오스 안전보위성 대표단 회담, 3월 4일 비엔티안에서 진행 및 ‘北 인민보안부-라오스 안전보위성간 호상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3.5,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3월 6일 라오스 주석의 생일 80돌 즈음 축전(3.6, 중앙통신)
- ‘조선의 위성발사는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조치’라며 UN 대북제재결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위성은 앞으로도 우주를 향하여 연이어 힘차게 날아오를 것’이라고 주장(3.6, 중앙통신·노동신문)

2.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유엔제재 앞두고 ‘미사일 생산기지’ 시찰(3/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의 주요 미사일 생산기지 중 하나로 알려진 태성기계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태성기계공장이 “우리나라 기계제작 공업부문의 맡아들 공장, 선각자 공장, 핵심 공장”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공장을 현대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기계제작 공업발전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자”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특히 김 제1위원장은 “태성기계공장을 현대화할 데 대한 당의 결심이 나라의 기계제작 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결심,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가장 정당한 결심이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현대화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핵탄두 임의의 순간에 쓸 수 있게 준비해야”(3/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지도하면서 “미제가 군사적 강권을 휘두르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전쟁과 재난을 강요하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뿐”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금 적들이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개성시 당 책임비서에 허성호 임명(3/2, 조선중앙방송)**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일 노동당 공동구호 관철 및 '70일 전투' 추진을 위한 개성시 군중대회 소식을 전하며 "허성호 개성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보고를 했다"고 보도함.
- 허 신임 책임비서는 보고에서 "충정의 70일 전투는 수령결사옹위전, 수령의 유훈관철전이며 당정책옹위전"이라며 "모든 일꾼과 당원, 근로자들이 보람찬 전투에 한결같이 떨쳐 나셔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김정식 노동당 부부장, 김정은 측근으로 급부상(3/6, 연합뉴스)**

- 김정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잇따라 수행함으로써 김 제1위원장의 측근으로 부상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뉴스가 6일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 부부장은 지난해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군 인사를 단행했을 때 전략군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1년간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다가 지난달 19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광명성 4호 기념사진 촬영' 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함.
- 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광명성 4호 발사에 참여한 인물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 김 제1위원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임을 받는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혔다고 설명함.

다. 공식 행사

■ **北, 식수절 맞아 평양 곳곳에서 '나무심기' 행사(3/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일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을 산림복구 전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쫓겨간 모음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앞마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이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용진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국가계획기관·통계기관 창립 70돌 중앙보고회(3/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가계획기관과 통계기관의 창립 70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지난 5일 평양

-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렸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은 보고회에서 보고를 통해 “중앙적인 계획통계기관이 창립됨으로써 국가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경제의 새 역사, 인민적 통계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말함.
 - 행사에는 로두철 부총리를 비롯해 오수용 노동당 비서, 최승호 중앙통계국장, 성 및 중앙기관 일꾼 등이 참석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제재봉쇄 책동 맞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해야”(2/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억센 자주적 대(죽대)를 세우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해 제재와 봉쇄를 들이대어 경제적으로 질식마비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런 조건에서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시하고 내밀어야 할 중요 임무”라며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없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이어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당면하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규정하면서, “진보적 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기 위해 책동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 힘에 의거하고 있다”며 침략과 간섭, 압력에 맞서 국방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임.
- 북한, 김정은 ‘판문점 시찰 4주년’ 맞아 총성 독려(3/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판문점을 뒤흔든 승리의 뇌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고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에 보다 강도 높은 대응조치로 단호히 맞설 백두산 혁명장군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한미 연합

훈련에 맞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판문점 시찰(2012년 3월3일) 4주년을 맞아 그의 배짱과 신념을 찬양하며 충성을 독려함.

- 이어 신문은 “지금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려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며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자비를 모르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본때”라고 주장함.

- ‘혁명적 사상공세로 적들을 제압하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전의 포성을 더욱 힘차게 울려야 할 때’라며 ‘선전선동의 뒷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70일전투를 대비약, 대혁신으로 빛내어나가자’고 선동(2.29, 중앙통신·노동신문)
- ‘광명성-4호’ 성과적 발사와 관련한 새 우표들(소형전지 2종) 발행(2.29, 중앙통신)
- 식수절(3.2) 7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3월 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3.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발표(‘93.3.1) 23주년을 맞아 ‘사회주의는 어제도 오늘도 인류의 이상이며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인민이 언제나 승리하듯이 사회주의도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3.1, 중앙통신)
- ‘총정의 70일 전투의 중요성과 의의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3월 1일 리혜정(사회과학원 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과학원에서 진행(3.1, 중앙통신)
- 당 중앙위원회·당 군사위원회 공동구호 관철 군중대회, 2월 28일과 29일 황해북도·자강도와 시·군들에서 진행(3.1, 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2.26), 공로 있는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노동자·기술자·일꾼들에게 국가표창 수여(3.1, 중앙통신)
- ‘당 중앙위·당 중앙군사위 공동구호 과업 관철 및 70일전투’ 관련 군중대회들과 궤기모임, 개성시(허성호 개성시 당 책임비서 보고)와 황해남도 삼천군(리종춘 군당 책임비서 보고)·용성기계연합기업소(전인철 당 책임비서 보고)에서 각각 진행(3.2, 중앙방송)
- 당 중앙위·중앙군사위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관철 및 70일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한 군중대회, 2월 28일과 29일 황해북도·자강도·개성시·북창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진행(3.3, 중앙통신)
- 김정일 삼지연군(삼지연군 삼수발전소 건설장, 양강도 예술극장) 현지도 10돌 기념보고회, 3월 2일 각속 진행(3.3, 중앙방송)
- 토지개혁법령 공포(‘46.3.5) 7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3월 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3.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서병화(함흥 수리동력대학 연구사, 80세)·박홍웅(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 연구사, 70세)에게 생일상 전달(3.5,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계획기관과 통계기관 창립(‘46.3.6) 7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3월 5일 청년 중앙회관에서 진행 및 오수용(黨 비서)·로두철(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보고) 등 참석(3.5, 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취주악대 경연, 3월 6일 김일성광장과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3.6, 중앙통신)
- 北, 黨 제7차대회를 향한 70일전투 분위기 고조를 위한 방송선전·직관선전·강연 선전 힘있게 전개(3.6, 중앙통신)

3.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군수공장 현대화 박차…김정은 지시 따른 것”(3/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군수공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3일 방송에 출연, 미국의 상업위성이 지난해 10월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평양의 강동정밀기계공장이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방송은 강동정밀기계공장 외에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탱크 등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1월18일기계종합공장, 선박수리 공장인 북한 해군 제597부대 산하 10월3일공장 등이 최근 개보수 작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전함.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北, 5월 당대회 앞두고 “2월 경제계획 초과달성” 주장(3/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일 ‘인민경제 여러 부문, 2월 계획 초과완수’ 보도에서 “인민경제 여러 단위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만리마를 탄 기세로 영광의 5월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며 2월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힘.

- 방송은 또 '석탄공업부문 높은 생산실적' 보도에서 김영남 석탄공업성 부상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달 석탄 생산이 계획보다 14% 늘었다고 보도함.
- 이어 김 부상은 "우리 탄부들이 조건이 좋아서 생산실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당대회에 드릴 자랑찬 노력적 선물을 마련하자고 한 사람 같이 펼쳐 나섰기 때문에 오늘의 성과도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中 단둥항서 1일부터 북한산 광물 수입금지 돌입”(3/2, 니혼게이자신문)**
 -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일부 항구에서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에 돌입했다고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함.
 -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한 무역 관계자는 “항만 당국으로부터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통지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압록강대교)’의 중국 쪽 세관을 통해 1일 오전 약 70대의 차량이 북한에서 들어왔지만 석탄으로 보이는 물건을 실은 것은 한 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소개함.
- **中, 대북송금·북한산 광물수입 중단…유엔 앞서 독자 제재(3/2,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금을 전면 차단하고, 단둥항에서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2일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중국 각 은행 창구에서 만난 은행 관계자들은 북한 은행들과 달러, 인민폐(위안화) 등 모든 화폐를 통한 거래를 중단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힘.
- **러 철도공사 “한국측과 ‘나진-하산 프로젝트’ 협상 계속할 것”(3/4, 리아노보스티통신, 타스통신)**
 - 리아노보스티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주관사인 RZD는 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함.
 - RZD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 29조에 따르면 새 제재가 나진항을 이용한 러시아

로부터 제3국으로의 에너지 자원 수출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를 국제사회 고위급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파트너들과의 건설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 “北, 몽골 통해 사치품 무기 제조장비 입수”(3/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몽골을 통해 입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방송은 중국에 채류 중인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외교관이 몽골을 경유해 전자제품과 사치품을 평양으로 나르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북한이 외국에서 구입한 금지품목을 제3의 회사나 개인 명의로 일단 몽골까지 이동시킨 다음 다시 북한에 부치는 것”이라고 전함.

- 北, 해산-삼지연 기차굴 공사량의 60%를 수행하는 성과 이룩(2.29, 중앙방송)
- 北, 전력 관리체계를 전기절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진행(3.1, 중앙통신)
- 경공업부문 일꾼들의 지난 1월 하루 평균 생산량보다 “공업생산액 134%, 일반천 생산 145%, 양말 생산 230%, 신발 생산 332% 장성” 등 ‘경공업성의 70일전투’ 주력(3.2, 중앙방송)
- 수산성 산하 서해지구 수산사업소·수산협동조합들, 서해 어장들에서의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집중 어로전 전개(3.3, 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일꾼들과 과학자들, 조선식 태양빛에너지(에너지)발전체계연구와 태양빛에너지 이용제품생산의 공업화실현에 성공주장(3.3, 중앙통신)
- 철강재생산기지들, 70일 전투가 고조되는 속에 연일 혁신적 성과(3.3, 중앙통신)
- ‘토지개혁법령’ 발표(‘46.3.5) 70주년 즈음 김일성 父자의 ‘사회주의 농촌건설 위업’ 찬양 및 畵民의 ‘농업발전에서 근본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과 자강력제일주의 구현’ 주문(3.5, 중앙방송·노동신문)
- 대동강텔레비전 수상기공장의 ‘숫자식 텔레비전 생산 추진’ 등 “전자공업성 산하 단위들의 국산화된 전자제품 생산” 선전(3.5, 중앙통신)

4.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 소설가 정기종 사망·김정은 조화 보내(2/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유명 소설가 정기종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통신은 정기종의 체적인 사망 일자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동지가 김일성훈장 수훈자이며 김일성상 계관인인 4·15문학창작단 작가 정기종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28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전함.
- “북한 주민 사이에 ‘중국군 공격’ 유언비어 퍼져”(3/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주민들 사이에 중국군이 공격해올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2월 22일부터 노농적위군과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에 ‘전투동원태세’를 발령했는데 이때부터 북중관계가 눈에 떨 만큼 나빠졌다”면서 “양강도 사람들이 언제라도 중국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말에 편히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이어 “초기에는 별다른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으나 3월 1일부터 북중 세관업무가 중단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압록강 주변 대규모 중국군이 집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지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임.

■ 北 “올해 김일성방송대학 남한 졸업생 218명” 주장(3/6, 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홍보 및 교육용 ‘사이버 대학’인 김일성방송대학은 올해 남한 졸업생 수가 2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6일 김일성방송대학의 홈페이지 ‘우리민족강당’에 따르면 차경수 부학장은 지난 달 24일 열린 이 대학의 제48기 졸업식에서 “졸업생은 모두 327명이며 그 중 남조선 지역의 졸업생 수는 218명”이라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인민군 장병들, 3월 2일 식수절을 맞아 710여만 그루의 나무 식수(3.3, 중앙통신)
- 北 작가들, ‘70일 전투의 열의를 북돋아 주는’ 소설과 서사시 등 2,000여 편의 작품들 창작(3.4, 중앙통신)
- 北, 참매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함경남도 덕성군 상돌리와 신태리 일대를 보호구로 설정(3.4,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유엔 北제재> 러시아 유엔대사 "6자회담 조속 재개해야"(3/3, 연합뉴스)
 -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음.
 - 추르킨은 "대북 제재는 아주 단호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겨 놓았다"면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가동돼야 한다고 촉구했음.
 - 그는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줄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모든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정치·외교적 해결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나 북한 도발 억지를 명분으로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허용돼선 안 된다면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시했음.
-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본격적인 도발 서막인가(3/3, 연합뉴스)
 - 군 당국은 북한이 3일 초강경 유엔 대북제재 채택에 맞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사거리로 미뤄볼 때 KN계열이나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mm 방사포로 추정되고 있으며, 군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북한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고 이에 따른 내부 동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함께 도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특히 군은 오는 7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시작

되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北, 3년째 3월 초 '단거리 발사'... '3월 주기' 고착화하나(3/3, 연합뉴스)**

- 북한이 공교롭게도 3년째 3월 초에 단거리 발사체(미사일 포함) 발사를 감행해 '3월 초 발사' 주기가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지난해에는 3월 2일에는 스커드-C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2014년 3월 3일에도 스커드-C 미사일 2발을 쏘음.
- 2014년과 2015년은 키리졸브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대응 차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무력시위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38노스 "北, 서해 발사장에서 로켓엔진 실험준비 가능성"(3/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7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던 곳 부근에서 차량 행렬이 목격됐고, 이는 북한이 새로 로켓엔진 실험 준비에 나선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3일(현지시간) 분석함.
- 38노스는 지난달 21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으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는 5대의 트럭 행렬이 촬영됐으며, 이전에 서해 발사장 주변에서 트럭 행렬이 목격된 시점은 발사장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이거나 로켓 엔진을 시험할 때였다고 38노스는 설명함.
- 38노스는 그러나 발사장 주변의 적외선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엔진 실험 때 발생하는 연기나 열 때문에 변색된 곳을 발사장 주변에서 찾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북측이 아직 로켓 엔진 실험에 나서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음.

■ **'실전배치 임박' 北 300mm 방사포, 계룡대·미군기지 타격 가능(3/4,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일 직접 시험사격을 지도한 300mm 신형 방사포는 남한 수도권 이남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최신 무기로, 북한은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300mm 방사포를 전격적으로 공개해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음.
- 우리 군은 300mm 방사포의 사거리가 170km이며 최대 200km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쏠 경우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전북 군산 주한미군기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들어감.

- 북한의 300mm 방사포 실전배치가 임박함에 따라 우리 군이 사드 배치와는 별도로 북한의 화력에 대한 대비체계를 빠르게 강화하는 것도 불가피해 보임.

■ **미국방부, 北 핵위협에 “핵무기 소형화 능력 확인 안돼” 일축(3/4,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일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 절하했음.
- 이날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보도된 뒤 AFP통신에 "(북한 핵 역량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실험이나 시연을 아직 본 적 없다"고 말함.
- 이와 함께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동맹국과 함께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킬 도발을 그만 두고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함.

■ **“北, 더 도발할 가능성”…김정은 핵탄두 발언에 日 경계(3/4,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연습(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등 한층 강한 도발행동을 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경계감시, 정보수집, 분석을 계속하겠다.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함.
- 집권 자민당은 이날 북한 핵실험·미사일 문제 대책본부(본부장 다니가키 사다가즈<谷垣禎一> 간사장) 회의를 도쿄 당 본부에서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 등을 논했음.

■ **“北핵탄두 있다면 어디다 숨겼나”…한미 정보당국 추적중(3/6, 연합뉴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북한이 실전 배치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초보적인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 주장이 공갈일 수도 있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허블망원경으로 북한을 살살이 들여다볼 수 있는 미국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핵탄두'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라고 밝힘.

- 한미 정보 당국은 시긴트(SIGINT·신호감청)와 휴민트(HUMINT·인적첩보)를 총동원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탄두 보유' 발언이 사실인지를 추적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AP통신에 "(북한 핵 능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실험이나 시연을 아직 본 적 없다"고 말함.

나. 미·북 관계

■ 오바마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 대응…北대가 치를 것"(3/3,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통과시킨데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강력하고 단합되며 적절한 국제사회의 대응"이라고 환영함.
- 그는 이어 "이번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나는 지속적으로 북한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대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경고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오늘 한목소리로 북한에 단순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북한은 위험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함.

■ 케리 美국무 "20년만의 최강제재…北정권 책임 물을 것"(3/3,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 데 대해 낸 성명에서 "안보리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는 이번 결의안에 따라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위협을 주는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확산 행위에 따른 위협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함께 조율된 행동에 나서겠다는 집단적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고 덧붙였다.

■ **황병서·오극렬·리용무 제재…북한 黨軍 핵심인사 조준(3/3,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발맞춰,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돌입했는데,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비롯한 북한의 통치기구와 북한 군부의 핵심인사들을 직접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주목됨.
-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오전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국방 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오극렬·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을 특별 제재 대상에 지명했다고 발표함.
-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보조를 맞춰 도발을 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북한의 최고위층을 직접 겨냥하고 핵심 국가기관도 포괄적인 제재대상으로 삼는다는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함.

■ **미국 백악관 "대북제재, 북 지도부에 대가 치르게 하려는 것"(3/3,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지도부의 결정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북한 주민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우선 순위에 뒀다"며 이런 북한의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함.
-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매우 고립된 곳이고, 심한 독재체제여서 (일반 북한 주민을 위한) 자금이 북한 안으로 유입돼서 그들(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그래서 제재의 초점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특히 유입되는 수입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함.

- **美의원들 “북핵 저지 모든 수단 동원…제재 신속히 이행해야”(3/3, 연합뉴스)**
 -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을 환영하면서 회원국들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함.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돈을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상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8일 로이스 위원장이 주도한 대북제재법에 서명함으로써 첫 대북 제재법 이행에 들어갔는데, 이 대북 제재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의 대북 제재법 공동 발의자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도 환영 성명을 냈음.

- **주러 北 대사 “핵무기 포기하려면 국가안보 보장해야”(3/3, 연합뉴스)**
 - 김형준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는 "(핵무기)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이 방법이 우리 국가안보를 보장해준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방송이 3일 일간지 '트루드'를 인용해 보도함.
 -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김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채택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핵무기 포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대북 강경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포기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함.
 - 김 대사는 "제재는 국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원시적이고 음흉한 정책"이라며 "이 정책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 기본 입장은 그 어떤 제재라도 취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국무부 “北 명백한 도발…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중요”(3/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실제로 발사했는지 내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발사한 것으로 치고 말한다면 이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과거부터 계속 돼 온 북한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말함.
- 그는 특히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중요성, 그리고 북한에 대해 더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줄 뿐"이라고 강조함.
- 한편, 미 정부는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독자 제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음.

■ **美, 北에 "도발적 언행 삼가라"…ICBM 본토공격 능력에 회의(3/5,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실전 배치한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선제공격 하겠다고 발언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도발적인 언행을 삼가라"고 촉구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의 안보를 보호하는 책임을 진지하게 간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미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AFP 통신에 "(북한의 핵공격 능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해 시험발사를 하거나 그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힘.

■ **북한 "美 도발시 남조선 미군기지·美본토 목사발" 또 위협(3/6,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이 도발하면 우리나라의 미군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목사발'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며, "우리의 막강한 무력은 도발자들이 감히 움쩍하기만 하면 본거지들을 목사발로 만들 것"이라면서 "타격 대상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기지들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 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들과 미국본토"라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에게는 미국 땅덩어리를 마음먹은 대로 두들겨 뺄 수 있는 세계가 가져본 적이 없는 강위력한 최첨단 공격수단들이 다 있다"면서 "우리의 강위력한 핵타격 수단들은 침략의 아성들을 조준권 안에 넣고 있으며, 보복타격의 격발기는 당겨놓은 상태"라고 밝힘.
- 신문은 이어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해 세기를 두고 다져온 우리 식의

타격전은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보복전으로 될 것이며, 만 가지 악의 소굴이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잿가루로 만들어놓을 것"이라고 위협을 가함.

■ **北, 한미훈련에 “전쟁 터지면 책임 미국이 져야” 위협(3/6,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7일 시작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이 조선반도에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위협함.
- 외무성 대변인은 6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 땅덩어리를 마음대로 두들겨팥 수 있는 최첨단 공격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며 강위력한 주체탄, 통일탄을 쏠 수 있는 무기들을 부단히 개발 완성해 실전 배비(배치)하고 있다"며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은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담화는 "미국이 우리에게 극단적인 핵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선제타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자위권의 행사"라며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했든 관계없이 수많은 전략 자산들과 전쟁장비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져야 한다"고 말함.

다. 중·북 관계

■ **“中, 대북제재 결의후 北이 보일 격한 반응에 경계태세”(2/29, 연합뉴스)**

- 중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날 선 반응에 이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AP통신이 중국 외교 관리의 말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두어 달 지나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상황이 대단히 민감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이 보일 반응에 경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함.
- 그는 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도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후 모든 국가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조치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미국이 북한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대가로 남북 간 영구적 평화협정과 같은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중국 공군소장 “北 반세기 식량지원받고도 배은망덕…용납못해”(3/1, 연합뉴스)
 - 중국 공군 장성이자 군사평론가인 차오량 소장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으면서도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며 "배은망덕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UPI통신이 홍콩 월간지 '쯔징'(紫荊)을 인용해 29일(현지 시간) 보도함.
 - 그는 이 잡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반세기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온 모든 일이 조건 없는 원조, 단서를 달지 않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북한은 과거 중국의 반응을 염려하곤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함.
 - 또 그는 "북한이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이 스스로의 정치체제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특히 그는 "북핵 이슈의 열쇠는 미국의 손안에 있으며, 중국의 손은 묶여 있다"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관련국들 사이의 대화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함.

- 中, 대북송금 북한산 광물수입 중단…유엔 앞서 독자 제재(3/2,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금을 전면 차단하고, 단둥항에서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중국이 한발 먼저 독자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모양새임.
 - 2일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중국 각 은행 창구에서 만난 은행 관계자들은 북한 은행들과 달러, 인민폐(위안화) 등 모든 화폐를 통한 거래를 중단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힘.
 -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일부 항구에서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에 들어갔다고 보도하기도 함.

- <유엔 北제재> 北中교역 ‘빙하기’…국제사회 돈줄죄기에 직격탄(3/3, 연합뉴스)
 - 사상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중 교역 전반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 이번 결의안의 목적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도발에 소요되는 돈을 죄는 것이기 때문에 북·중 교역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이 추진하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화물·금융 제재에 이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중·삼중의 차단장치'라는 평가를 받았음.

■ <유엔 北제재> 시진핑, 4년간의 북핵 불용 원칙 관철(3/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줄곧 밝혀온 북핵 불용 원칙을 관철시킴.
- 중국은 한국과 함께 조속한 결의채택에 난색을 보이던 러시아를 집중 설득하는 열의를 보일 정도로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적극적이었는데, 여기엔 시 주석이 취임 초기부터 밝혀온 북핵 불용 원칙이 크게 반영됐음.
- 특히 북한을 더이상 이데올로기적 동질성과 한국전쟁 참전을 바탕으로 한 '혈맹'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 이웃나라 가운데 하나로 여기려는 중국의 경향도 이번 제재 참여로 뚜렷해지고 있음.
-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대외정책이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변해가는 만큼 중국의 이번 제재 참여는 또다른 의미를 남길 것이라는 관측임.

■ <유엔 北제재> 북중관계 '경색'...2013년 수준으로 회귀(3/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북중 관계는 상당 기간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최근 상황은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공식 출범한 2013년과 유사점이 많아 양국 관계의 시곗바늘을 3년 전으로 되돌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이미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실제로 광물 수입 금지나 대북 송금 금지 등 자체적인 제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돼 북중 교역은 '최악의 빙하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큼.

■ 중국 정부 "대북 제재 결의안 성실하게 이행"(3/3,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가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조선(북한)의 추가적인 핵 미사일 개발 계획을 억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며, 핵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며 중국도 결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의 이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중국은 앞으로 이 결의를 지킬 것이고, 각국도 전면적으로 진지하게 집행할 것을 희망한다"며 "이번 결의는 국제 사회의 공동인식에 따라 통과된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어떻게 하면 6자 회담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이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기했다고 말함.
- 한편, 홍 대변인은 "중국은 반도에 '사드'(THAAD·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유관 국가가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희망한다"며 한미 양국이 배치 논의중인 사드 문제도 다시 거론함.

■ <유엔 北제재> 中 신화통신 “北 필요한 대가 치러야”(3/3,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들이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은 대가를 치러야 하며 북핵은 용인될 수 없다는 등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섬.
-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신화통신은 결의안 통과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핵 문제에 대한 결의안 통과를 북한에 대해 진일보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과 위성 발사 행위에 대해 치러야 할 필요한 대가"라고 지적함.
- 통신은 그러면서도 "제재는 필요하지만,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라며 "안보리가 통과시킨 새 결의안의 의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라고 강조함.
-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 기존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일체의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함.

■ 우다웨이 “北, 제무덤 파고있어…中, 안보리결의 충실이행”(3/4,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 대표가 최근 방한 기간 일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4일 전해짐.
- 그는 북한이 4차 핵실험 계획을 중국 측에 통보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북 직후

-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이 중국 얼굴에 먹칠한 것"이라고 지적함.
- 우 특별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제재에 동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 **中 "북한의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은 영향받지 않을 것"(3/4, 연합뉴스)**

- 중국정부가 4일 유엔 안보리에서 최근 통과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무관한 북중 자원교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에 석탄, 철광석, 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각국은 민생 목적과 핵미사일 투자 계획과 무관한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함.
- 이는 대북 결의안이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 수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만,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대북 송금과 북한산 광물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중국, 북한 선박 31척 블랙리스트에 올려(3/5, 연합뉴스)**

- 중국 해양 당국이 북한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 31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로이터가 4일 확인한 교통부 문서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 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나온 것임.
- 지난 3일자 교통부 문서에 따르면 중국 해상안전청은 북한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유 선박 31척이 중국 항구와 수역에 있는지를 "긴급히" 확인해 교통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 문서는 또 "당국은 그 선박들이 중국 항구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유엔 제재안을 실행하는 데 있어 극도로 민감한 부분"이라고 전함.
- 교통부는 이에 관한 확인 요청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

■ **中, 올해 향후 5년간 중점사업서 북중 경험 통째로 빼(3/6,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배포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사업 보고서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

획(13·5규획, 2016~2020년)' 초안 요강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가 올해와 향후 5년간의 중점 사업 가운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째로 배제한 사실이 6일 확인됐음.

- 발개위는 보고서에서 올해(2016년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새로운 동북진흥 전략(2016~2018) 수립과 이행'을 거론하면서 동북 지역에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과 중국과의 양자 합작 플랫폼을 설치하고 중국-몽골 간 경제 합작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중점 추진분야로 제시했지만, 북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 13·5 규획 요강 초안에도 새로운 동북진흥 전략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의 국가와 합작 플랫폼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으나 북한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음.
- 이는 지난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등 북한과 국경을 접한 지방 정부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올해 계획안에서 빼 버렸기 때문으로 분석됨.

라. 일·북 관계

■ 아베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제재 엄격히 실시할 것"(3/3,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결의 내용을 엄격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결의에는 일본의 주장도 담겼다. 매우 엄격한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명확한 메시지다"라며 이같이 밝힘.
- 아베 총리는 이어 "결의에는 인도적 문제도 언급돼 있다"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은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납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북한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새벽 대북 제재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한 직후 논평을 통해 "높게 평가한다"고 환영하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문한 바 있음.

마. 러·북 관계

- <유엔 北제재>러 “北, 결의 합당하게 수용하고 올바른 결론 내려야”(3/4,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해 러시아가 3일 (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올바른 결론'과 국제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촉구함.
 -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이 이 결정(안보리 결의)을 합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지난 2005년 6자회담 참가국들의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군사정치적 긴장해소 진전, 대결적 인프라 해체, 효율적인 국제법적 안보 체제 확립 등을 이루는 맥락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촉구함.
 - 외무부는 그러면서도 "안보리 결의 내용이 북한 주민의 경제·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더구나 긴장 고조와 역내 새로운 분열 노선 출현 위험을 내포한 군비경쟁 강화 등이 허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함.
 - 한편,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 계획과 관련 "당사자들이 이 계획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숙고하길 바란다"면서 기존의 강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함.

- 러시아 “김정은 핵위협 발언 심각하게 우려”(3/4, 연합뉴스)
 - 러시아 크렘린궁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위협 발언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4일(현지시간) 밝힘.
 -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김 위원장이 핵탄두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확실히 이번 사안은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함.
 - 페스코프 공보비서는 "물론 우리는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지역 내 모든 국가와 제3국들이 균형과 자체심 유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접근해 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함.

바. 기타

- 러시아 ‘北나진항 포기못해’…안보리 결의안 수정 관철(3/2, 연합뉴스)
 -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북한산 광물 거래 제한 규정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러시아의

요구로 수정된 대북제재 결의안에 들어감.

- 아울러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들어갔으며,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가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다.
- 더불어 북한으로의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초안에 예시됐던 장비와 재료 등의 목록도 삭제됐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으며, 대신 그 목록은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제재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감.

■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3/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임.
-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경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해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됨.
- 새 제재는 특히 WMD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으며,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했음.
- 마찬가지로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사무소·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WMD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함.

■ **〈유엔 北제재〉 대북제재결의 2270호 주요 내용(3/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라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는데,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 항, 대북 제재 내용 및 이행계획을 기술한 본문 52개 항, 그리고 5개 부속서로 구성됨.

- 특히 거의 모든 조항에서 '결정한다(decide)'라는 표현으로 회원국들의 이행을 의무화 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직접 연관되는 분야만 제재했던 과거와 달리, 간접적으로 WMD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까지로 제재의 범위를 확장함.
- 또한, 북한이 WMD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와 자금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제재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함.
- 이번 대북 결의는 북한의 ▲무기거래 ▲제재 대상 개인·기관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를 정조준하고 있음.

■ <유엔 北제재> 日, 존재감 있는 '조연'...탄력받은 '아베의 꿈'(3/3, 연합뉴스)

- 이번 결의에 일반의 예상 이상으로 강한 내용이 담긴 것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퇴로없는 강경기조와 개성공단 중단 결단으로 표출된 한국의 의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중간의 조율 등이 결정적이었지만 일본도 논의 과정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게 일본 내 중평임.
- 올해 비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안보리에 복귀한 일본은 실제로 북한이 1~2월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각각 단행했을 때 안보리에서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강경한 입장을 펼침.
- 이 같은 행보는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및 국내정치 어젠다와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임.
- 우선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는데,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하자 일본은 방향을 전환,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의 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의욕을 보이는 것이 한 예로 볼 수 있음.

■ <유엔 北제재> 중·러와 타협한 조항들 제재 '구멍' 될까(3/3, 연합뉴스)

-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된 제재 조항들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되는 이번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중국은 또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 거래를 제한한다는 제재에서 민생 목적이거나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관철했는데, 여러 해석의 여지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라는 점에서 향후 적용 과정에서 북한 돈줄 차단에 '구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임.
- 러시아의 막판 요구로 수정된 결의안 내용 중에는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광물은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 등이 포함됐는데,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의 요구로 수정된 조항들에 대해 "전체 제재에 크게 구멍이 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한·미의 평가"라고 말함.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로버타 코헨은 AFP통신에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나 그랬듯 제재의 전면 시행을 피하기 위해 구멍을 찾을 것"이라고 말함.

■ <유엔 北제재> 러시아, 한반도 주변강국 입지 확대 노리나(3/3, 연합뉴스)

-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을 넘겨받고 1주일 가까이 뜸을 들인 것에 대해 결의안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한반도 주변 강국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겠다는 나름의 계산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 많음.
- 러시아와 북한은 2014년부터 고위급 인사 교류와 각종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며 급속도로 관계를 발전시켜왔음. 이후 러시아의 경제난으로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었고, 긴밀해지던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안보리의 제재 결의로 상당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러시아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라도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 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음.

■ <유엔 北제재> 러 외무부 "대북결의 고의적 지연 시도한 적 없다"(3/3, 연합뉴스)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외교부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1주일 가까이 늦어진 것과 관련 "정부 내 부처들과 문건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추가적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어떤 식으로든 어렵게 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한반도 사태 해결과 안정화, 최근 전개된 긴장 고조 상황 차단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것이 결의의 기본 목적이라고 말함.
-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에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결의 채택 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정세 전망과 동북아 지역 안보와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 <유엔 北제재> 만장일치 결의후에도 안보리 팽팽한 신경전(3/3, 연합뉴스)

- 초강력 대북 제재가 결의된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는 이번 제재를 주도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에 제동을 걸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한 번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음.
-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전원 찬성을 표하자 마틴스 의장은 만장일치로 제재안이 결의됐다고 선포했는데, 이어진 안보리 이사국들의 발언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온도차'가 여전했음.
- 첫 발언에 나선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실제로 북한의 모든 자원은 무모하고도 집요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는 북한 주민이 아닌 지도층을 조준한 것임을 분명히 했고, 요시카와 모토히데 (吉川元偉)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북한은 이 메시지가 단지 안보리가 아닌, 전체 국제사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는 제재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함.
- 그러나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한 목소리로 이번 제재가 북한을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함.

■ <유엔 北제재> 중·러 vs 한·미 '사드 한반도 배치' 놓고 설전(3/3, 연합뉴스)

-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함.

-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한반도 사드 배치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키울 뿐이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북한 정부의 활동을 이용해 공격용 무기, 사드 등 이 지역의 전력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우리의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핵실험에 대한 응징과 사드 배치를 연관시키는 데 반대함.

■ <유엔 北제재> 러 "나진-하산 프로젝트 대북 결의 영향 안받을 것"(3/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러시아가 추진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일(뉴욕 현지시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스스로의 특정 경제 이익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면서 "특히 나진~하산 구간 철도를 이용해 중국 남부 지역과 한국으로 러시아 석탄을 수출하는 사업이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함.
- 추르킨은 "러시아와 중국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전혀 관계없는 경제적 이해가 있고 이같은 이해가 제재 결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미국 대표단과 추가적 협상을 벌여 성공했다"고 소개함.

■ <유엔 北제재> 中,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본격 시동(3/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동시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체결 병행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음.
-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3일 '중국이 대북 결의안에 찬성한 3가지 주요 원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 중 하나는 "조선핵(북핵) 문제를 대화·담판의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 또 "중국은 각국이 담판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담판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라며 중국은 이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아이디어를 제시한 상황이라고 덧붙임.

- '중·러 반대' 사드협약...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행 영향주나(3/4,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하루만인 4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북핵 대응 외교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칼자루'를 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결의 실천 동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옴.
 - 중·러 모두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번 결의를 함께 도출했고 충실한 이행 방침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의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를 안보리 결의 이행에 당장 연계하고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우리 정부 내의 관측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드 배치 문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결의 이행 및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는 데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움.

- EU, 대북 추가 제재...개인 16명·단체 12개 신규 제재(3/5, 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단행했는데, EU 각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고 밝힘.
 - EU 각료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것이며, EU의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밝힘.
 - EU는 이번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EU 독자의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북한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EU 외교소식통이 전함.

- 北 미사일·남중국해 분쟁에 데인 필리핀, 대북 신속 제재(3/6, 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북한 선박이 필리핀 당국에 압류되면서 결의가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 필리핀 당국의 북한 선박 '진텅호' 압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조항을 특정 국가가 실제로 집행한 사실상 첫 사례임.

- 진텅호는 선적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등록해 '국적 세탁'을 시도했으나 필리핀 당국은 결의에 명시된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압류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필리핀 당국의 조치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 된다는 평가임.

■ 안보리 결의후 잇단 독자제재…다층적 '北 옥죄기' 기동(3/6,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음.
- 안보리 제재에다 각국의 독자적 조치를 더한 '중층적·다각적' 대북제재 체제(regime)를 가동해 최대한의 대북 '옥죄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미·일 등 주요국들은 안보리 결의 이후 독자 제재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하고 서로 긴밀하게 제재 방안을 조율해 왔음.
-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2일(현지시간)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북한의 통치기구와 북한 군부의 핵심인사들을 직접적인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돌입했으며, EU도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재를 단행함.
- 일본은 이미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기로 확정했으며 국회의 사후 승인이 남았으며, 우리 정부도 이르면 이번주 초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국방부, "사드배치 필요하다는 미국 입장 유지될 것"(2/29, 연합뉴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사드 배치 논의는) 사드가 대한민국 방어에 도움이 되고 미국 측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그런 인

식 속에서 한미 간 공동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사드 배치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우주개발 탄력 전망(2/29, 연합뉴스)

-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보유한 첨단 우주 탐사 역량을 공유하는 내용이 담긴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체결됐다고 29일 밝혔다.
-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우주과학, 지구 관측, 우주 탐사 등 양국의 우주 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담은 것임. 그동안 한미 간에 이행기관 간 약정 등의 형태로 산발적·간헐적인 우주협력 활동이 이뤄져 오긴 했지만, 양국 정부가 협정 형태로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은 처음임.
- 우주협력협정은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포함한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무인 달 탐사 등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미국무부 "사드 배치와 유엔 대북제재는 별개…관련 없어"(3/1, 연합뉴스)

-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별개 문제로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 이어 "그 (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의 잇단 도발의 결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말했듯이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 논의도 필요 없을 텐데 불행하게도 북한은 다른 (반대의) 길을 선택했으며,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함.
- 커비 대변인은 특히 "(사드 배치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뭘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함.

■ 윤병세, 애플링컨 면담…안보리 결의 이행 양자제재 강화키로(3/3, 연합뉴스)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2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 채택 이후 대북 공조와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3일 전함.

- 윤 장관과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것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의 대표적 사례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양자 차원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
- 한미는 향후 주요 외교일정을 활용해 북핵,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넓은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함.

■ **한미 '대북 금융제재 라인' 오찬회동...결의이행 논의(3/3, 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가 3일 제재결의(2270호)를 채택한 직후 한미 양국의 대북 금융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자들이 회동함. 외교부 당국자는 "방한 중인 앤드루 켈러 미국 국무부 제재담당 부차관보가 3일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힘.
- 켈러 부차관보는 우리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 단장과 오찬 협의를 갖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방안과 한·미 양국의 후속 독자제재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한미 정부 내 한반도·금융제재 담당 당국자들의 접촉은 안보리 결의 채택을 전후해 활발해지는 모양새임.

■ **미 외교정책협회 교재에 한국 수록...“미국인 한국 이해 넓힌다”(3/4, 연합뉴스)**

- 대한민국 뉴욕 총영사관은 미국의 국제관계 연구 및 교육기관인 외교정책협회(Foreign Policy Association)의 교육자료 '그레이트 디시전'(Great Decisions) 2016년 판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음.
- 외교정책협회는 매년 국제관계 관련 8개의 주제를 선정해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 자료는 미국 전역 90여 개 국제문제협의회(World Affairs Council)에 배포돼 미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활용됨.
-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는 남북관계,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사회경제변화상, 한·미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담겼음.

■ '사드 배치' 논의 한미 공동실무단 출범...첫 회의 개최(3/4, 연합뉴스)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 실무단이 4일 공식적으로 출범해 첫 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회의에는 한국측 대표인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미국측 대표인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을 포함해 한미 양측 각각 약 10명이 참석했음.
- 국방부는 오전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힘.
- 공동실무단의 출범은 한미 양국이 지난달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지 약 한 달 만임.

■ 美하원의원, '한미일 동맹 중요성 확인' 결의안 발의(VOA)(3/4, 연합뉴스)

- 미국의 하원의원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국과 미국, 일본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의원이 지난 2일 하원에 제출한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결의안은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군 사훈련 실시를 지지하며, 역내에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한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되면 방어 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음.

■ 朴대통령 "한미 양국, 혈맹이자 진정한 친구"(3/4, 연합뉴스)

-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딘 헤스 미 공군 예비역 대령 1주기 추모식에 보낸 추모메시지에서 "고(故) 딘 헤스 대령의 추모식은 한미 양국이 외교적, 군사적 혈맹이자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친구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고 공군이 전했다.
- 박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한반

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유서 깊고 공고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역내의 평화와 민주적 가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강력한 중심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훈련, 美전력 신속전개·정밀타격 연습에 초점(3/6,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7일부터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 외에도 유사시 증원될 미군 전력의 신속 전개와 북한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임.
-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를 신속히 들여와 북한 핵심시설에 대한 공격 능력을 예리하게 가다듬는 것으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 조치로 풀이됨.
- 올해 키리졸브 연습에는 '작전계획 5015'가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 졌는데, 작계 5015는 북한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시설을 '족집게' 식으로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짐.

나. 한·중 관계

■ **〈유엔 北제재〉 개성공단 결단·한중정상 통화, 강력 결의에 기여(3/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한중 정상간 통화도 기여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하고 있음.
- 특히 과거 북한의 핵실험 때는 물론이고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도 유지됐던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대응 태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시기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지난 달 5일 통화도 주목할 포인트라는 지적인데, 내용 면에서는 기본 입장을 서로 재확인한 수준이었으나 형식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정상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임.

■ **中, 한미 '사드배치 공동실무단' 출범에 '신중한 행동' 촉구(3/4, 연합뉴스)**

- 중국은 한미 양국이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 를 논의할 공동 실무단을 공식 출범시킨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드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국가들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말함.
 - 또 관련 국가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중국의 정당한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 한·일 관계

- **朴대통령, 北에 핵포기 강력 압박 日에는 위안부 합의이행 촉구(3/1,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한 압박·제재 드라이브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임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음.
 - 이전 방식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북한 정권의 생존 차원에서 "핵개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수준의 고강도 대응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한 것임.
 -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5문장으로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대일 메시지는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과 역사 직시를 촉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실한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정부 내 대체적 인식임.
- **朴대통령 '일본의 실천' 강조에 日 "양국의 실행 중요"(3/1,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한일 군위안부 합의의 실천을 일본 측에 촉구한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한 양국 정부가 이번 합의를 책임감을 갖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일본 외무성은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번 합의(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일한관계를 미래지향의 새 시대로 발전시키도록

안전보장, 인적 교류,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일한협력을 강화하고 일한 관계를 크게 전진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 한일합의와 관련해 일본의 '실천'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양국 정부의 실행'을 거론한 것은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풀이됨.

■ “아베,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추진”(3/1,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보고 이달 31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제4회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짐.
- 아베 총리는 회담이 이뤄지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한일간 안보분야 협력을 진전시킬 방침이며, 특히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기 체결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아베 총리는 또 세계 경제의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점을 고려해 경제 분야에서도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인데,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참가하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도 본격 추진할 방침임.
- 이를 통해 대북 대응은 물론 남중국해에서 군사거점화를 진행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도 3국이 공조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함.

■ 뉴욕에서 한일 관계 대담회…“위안부 합의로 우려 해소”(3/4, 연합뉴스)

- 미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해 각각 설립된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재팬소사이어티가 일본 쉐라 스미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와 한-일 관계를 짚어보는 대담회를 공동 개최했음.
-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재팬소사이어티가 공동 행사를 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로, 지난해 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추진됨.
- 스미스 연구원은 작년 말에 양국의 갈등 요인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합의된 것을 계기로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고 언급했으며, 허바드 전 대사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日 도심서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시위... '협한' 주장도 나와(3/6, 연합뉴스)**
 -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일본 내 '협한'(嫌韓) 감정을 부추길 것이 우려됨.
 - 6일 일본 도쿄 도심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등의 주장을 내건 시위가 열렸으며 여기에는 한국을 비하하는 표현도 등장했음.
 -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일본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진 가운데 조선학교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집권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헤이트 스피치 문제는 일본인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집권 자민당은 일본 정부에 대북 제재로서 조선학교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

라. 한·러 관계

- **러 철도공사 "한국측과 '나진-하산 프로젝트' 협상 계속할 것"(3/4, 연합뉴스)**
 - 러시아철도공사(RZD)가 남북러 3각협력 사업으로 추진돼온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음.
 - 리아노보스티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RZD(프로젝트 주관사)는 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함.
 - 이 프로젝트를 5·24 대북 제재조치의 예외로 인정하고 지원해온 한국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초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사업 참여 중단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RZD는 이같은 소식에 대해 "한국 측이 빠지면 다른 파트너를 찾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한국 정부는 새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통과된 이후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함.
- **윤병세 "나진-하산 프로젝트, 가까운 시일에 러와 협의"(3/6,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 남북한과 러시아 3자 간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음.

- 윤 장관은 이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한러 간 협의가 가까운 시일에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진-하산 프로젝트 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와 같은 부분과도 관련돼 있다"며 "정부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최근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및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에 따라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 등을 놓고 러시아 측과 논의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마. 미·중 관계

- **중국, 2029년이면 공격형 핵 잠함 보유 척수 미국의 배(2/29, 연합뉴스)**
 -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 매체 더네셔널인터라스트(TNI)는 조지프 멀로이 미 해군 참모차장(통합능력·자원 담당)의 말을 빌려 오는 2029년이면 중국은 적어도 70척 이상의 공격형 핵잠수함을 보유할 것(미국은 2029년 기준 41척)이라고 28일(현지시간) 보도함.
 - 선 스타클리 해군 차관보(연구개발구매 담당)도 "현재 미 해군은 필수 보유 대수보다 4척이 많은 52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2020년대 말부터 줄어들어 2030년대에 들어서면 41척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같은 예측을 내놓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미 해군은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공약을 완수하려면 공격형 핵잠수함 보유 대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두 사람은 지적함.
 - 중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한 094형 전략 핵잠수함과 093형 계열의 공격형 핵잠수함, 구형인 091형 공격형 핵잠수함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핵잠수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남중국해 군사시설 확장할 것...일부 해양구조에 이용"(3/1, 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전망함.
 - 우스춘(吳士存) 중국 남중국해 연구원장은 미국이 중국이 통제하는 섬의 12해리(약 22km) 안으로 군함을 보냈기 때문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 시설 설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일 보도함.

- 우 연구원장은 "해상 수색·구조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SAR협약)에 따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구조 작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한다"며 "중국이 항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하이 자오통(交通)대의 한 연구원은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 개발을 위해 더 큰 선박과 준설선을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 <유엔 北제재> 中, '평화협정' 논의 드라이브 거나(3/3, 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채택됨에 따라 평화협정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안 합의를 위한 미중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고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는데, 평화협정 논의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전제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묵시적이거나 미국의 양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은 표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평화협정을 새로운 논의의 틀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 美國무부 "비핵화 협상-평화협정 논의 병행 가능성 배제 안해"(3/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함.
-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을 때 언급한 대로 우리는 병행 논의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커비 대변인은 "(병행) 논의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있어야 하고 6자회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비핵화가 어떤 형태의 논의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6자회담은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자 운반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中, 접경에 폭격기 전투기 전력 증강…北급변사태 대비용”(3/5, 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미군 전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러, 북중 접경 일대에 전폭기와 주력 전투기를 다수 배치했다는 관측이 제기됨.
- 5일 홍콩 봉황(鳳凰)위성TV에 따르면, 지난 1월 캐나다 군사평론지 칸와디펜스 리뷰는 중국이 작년 5월부터 네이멍구(內蒙古) 후룬베이얼(呼倫貝爾) 공군 기지에 폭격기 홍(轟)-6H를 최소 9배 배치·운용해오고 있다고 주장함.
- 이 잡지는 "공군 21사단은 주로 중북변경과 중러변경 지역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접경지역 부근의 공군전력이 증강된 것은 한반도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려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함.
- 또 홍-6H가 동북지역에서 출격하면 일본 대도시 대부분과 일본 내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고, 특히 아오모리(靑森)현에 배치된 '엑스(X)밴드 레이더(TPY-2 레이더)' 기지도 공격할 수 있으며, 한국 내 미군기지가 이 폭격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함.

바.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사. 미·러 관계

■ 나토 사령관 “러시아가 난민위기를 서방에 대한 무기로 활용”(3/2, 연합뉴스)

-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브필립 브리드러브 나토군 사령관 겸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정권은 유럽의 구조를 깨고 유럽의 결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난민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말함.
- 브리드러브 사령관은 또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의 적이 되기로 했고, 장기적인 실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유럽 주둔 미군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지지를 촉구함.
-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주변 지역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며 되살아나고 있는 공격적인 러시아에 대응하려면 유럽에서 더 많은 군사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아. 중·일 관계

■ “중국, 일본과 부총리급 외무장관 회담 추진의사 밝혀”(2/29, 연합뉴스)

- 중국은 29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중일 외무차관급 회의에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부총리급 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중국측은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부장과의 회담에 대해서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북한의 지난 1월 핵실험 이후 일본측의 요청에도 중일 외무장관의 전화통화도 거부했던 중국의 이런 자세는 중국이 대(對)일 대화노선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해석함.
- 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중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을 방문한 것도 처음으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임.

■ 일본, 필리핀과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 체결…중국 견제(2/29,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시카와 가즈히데(石川和秀) 주필리핀 일본대사와 볼테르 가르민 필리핀 국방장관이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 이 협정은 양국이 방위장비·기술을 공동 개발하거나 이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협정 체결로 양측이 방위 장비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마련됨.
- 일본 정부는 이번 협정을 근거로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경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상자위대 훈련용 항공기 'TC90' 중고품을 대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중국·일본 “단호한 대북 대응 필요” 일치…갈등현안은 ‘평행선’(3/1, 연합뉴스)

- 1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쑹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외교 차관보급 협의에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발표함.

- 하지만 두 사람은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 등 갈등 현안에서는 입장 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협의에서 일본 측은 중국이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동중국해 정세를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외무성은 소개했음.
- 이번 협의는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중국의 군사화 행보, '항행의 자유' 작전(미군 함선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안쪽으로 파견하는 작전)에 대한 일본의 공개 지지 등으로 뼈격대는 양국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풀이됨.

■ 손 내미는 일본 vs 손 빠는 중국…“고위급 경제대화 연기”(3/2,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정부는 올봄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던 고위급 경제대화를 가을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니혼케이자이(닛케이)신문이 2일 전함.
- 이는 지난달 29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중일 외무차관급 회의에서 쉬안유(孔鉉佑) 중국 외무 차관보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심의관에게 "당장 고위급 경제대화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임.
- 닷케이는 중국이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일본이 견제하는 등의 대치 분위기가 일정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함.
-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올여름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아베 정권과 얼마나 접근할지에 대해 검토하려는 생각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닷케이는 덧붙였다.

■ 중일 해상갈등 격화에 전투기 대응태세 강화하는 일본(3/3, 연합뉴스)

-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 격화는 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스크램블) 동향에서도 감지되는데, 일본 항공 자위대 전투기의 연간 긴급발진 건수는 2012년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크게 늘었음.
- 견제 대상 가운데 중국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일본 방위성이 2015년 4~12월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 발진 내역을 집계한 결과 중국 항공기를 견제하기 위한 긴급 발진이 약 66%인 것으로 파악됐음.
- 일본은 이런 가운데 뉴타바루 기지를 포함해 난세이(南西) 제도(규슈<九州> 남단에서 대만 동쪽에 이르는 영역) 일대의 경계 태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센카쿠 열도에 근접하는 중국전투기에 맞선 긴급 발진 거점의 하나인 뉴타바루 기지의 대응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임.

자. 중·러 관계

- <유엔 北제재> 중러 외교장관,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동시 강조(3/3, 연합뉴스)
 -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일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등을 논의했음. 이번 전화통화는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임.
 - 중국 외교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소통을 해왔다"고 평가함.
 - 왕 부장은 특히 "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여전히 대화 담판의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투트랙'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러시아의 협력을 당부했음.
 - 양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이구동성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강조하고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며 사실상 공동 전선을 구축했음.

차. 일·러 관계

- "일본 집권당 간부, 러시아 방문 방침"...아베 방러 사전 작업(2/29,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자민당 정조 회장이 올해 봄 러시아를 방문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나다 정조회장은 올해 4월 3~6일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자민당 관계자가 밝혔는데, 이나다 정조회장은 러시아 정부 주요 인사 및 러시아 여당인 통일러시아 당 간부와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아베 총리는 올해 5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이나다 정조 회장이 러시아 측과 현안에 관한 조율 등을 담당할 가능성이 주목됨.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인권상황 실질적 개선 노력해야”(3/2,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논의에 북측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한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며 북한 인권상황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통일부는 3월 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반발을 일축했음.
- 리 외무상은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3월 1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관련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리 외상은 북한에 대한 인권 논의는 “불공정성과 이중 기준의 증거”라며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회의에 “더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북한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임.
-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9일 개막했으며 이달 24일까지 진행됨.
-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부터 22일까지 북한, 버마,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의 인권 문제를 토의할 계획이며 특히 14일에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임.
-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과 24일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함.

■ “몰타 정부, 자국 내 북한 근로자 노동착취 조사 중”(3/4, 미국의소리)

- 유럽의회 관계자는 몰타 당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음.
- 이 관계자는 몰타 당국자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며, 조사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음.
- 앞서 독일 출신의 토마스 헨델 유럽의회 고용사회복지 위원장은 지난달 유럽연합 담당 기구들과 국제노동기구 ILO에 서한을 보내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음.

- 헨델 위원장은 독일 최대 공영방송인 'ARD'가 지난 1월 몰타 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뒤 서한을 보냈음.
- 'ARD' 방송은 이 보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2주에 하루만 휴식하며 하루 14시간 씩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방송은 또 유럽연합이 의무화한 최저임금은 한 달에 700유로지만 북한 근로자들은 10분의 1에 불과한 75유로, 미화 81달러를 받는다고 전했다.
- 유럽연합에 따르면 몰타의 2014년 기준 평균임금은 시간 당 12.4유로로 현지 북한 노동자들은 몰타인들의 하루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한 달 급여로 받는 것임.
- 헨델 위원장은 서한에서 “이런 식의 (노동) 착취는 충격적이며 유럽연합에서 용인될 수 없다”면서 “유럽연합 관련 기구들과 국제노동기구가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몰타 출신 데이비드 카사 유럽의회 의원도 몰타의 ‘인디펜던트’ 신문에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유럽연합 기구들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 카사 의원은 특히 “그 어떤 인권 유린이나 노동착취도 몰타 당국이 조사해 정당한 대응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럽의 금융 감시단체인 ‘Facing Finance’는 웹사이트에서 독일 언론보도 등을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아르마니 등 고급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는 몰타의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단체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업체의 중개를 통해 고용된다며 유럽연합 회원국에는 현재 1천여 명이 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 **北,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국회통과에 “중대도발” 주장(3/4, 연합뉴스)**

- 북한이 3월 4일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에 대해 “용납 못 할 중대도발이며 반민족적 특대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북한인권법과 테로(테러)방지법 조작성은 우리에게 대한 전면 체제대결 선언, 전쟁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다”면서 “박근혜 역적패당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여 전면도발을 걸어온 이상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조치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했음.

- 성명은 이어 “우리를 걸고 테로방지법을 조작해낸 것은 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에게 대한 고립 압살의 포위환을 좁혀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 성명은 “박근혜 패당은 애당초 인권이니, 테로니 하는 것을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며 “박근혜(대통령)는 이번 악법의 조작으로 극악한 대결광신자, 희세의 파쑈(파쇼) 폭군, 만고역적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을 퍼부었음.
- 통일부는 이에 대해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인권법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자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북한은 우리의 인권개선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도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표현으로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든 묵과될 수 없는 행동으로 북한은 이와 같은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 파견 북한 근로자 폐쇄 환경에 불만(3/4, 자유아시아방송)

- 외출금지, 임금체불, 충성자금 압박 등은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비인권적인 처우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해 중국 길림성 도문 지방의 한 조선족 상인은 “최근 북한에서 들어온 20대 여성근로자는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는 북한 관리들과 한판 다투고 짐을 싸가지고 돌아가 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 소식통은 “이 여성 근로자가 일하던 의류 공장에는 현재도 100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제하는 북한 행정직원은 5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 이 노동자들은 하루 작업을 마치면 공장 안에 있는 합숙소로 이동하여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외부와 완전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에 염증을 느낀 북한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소식통은 “과거 북한 여성 노동자들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했지만, 이 여성이 간부들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같이 일하던 중국 직원들도 크게 놀라는 눈치였다”

- 면서 “그 여성에게 든든한 ‘뺨’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이외에도 “현재 북한 근로자들은 장시간 연장 작업에 시달리고, 갖가지 명목으로 떼이는 월급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 북한 근로자들은 매달 2,000위안(\$300) 정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당국은 월급 외에도 보험과 적금 명목으로 추가로 공제한다는 것임.
 - 얼마 전 해외 북한 근로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동북지방을 방문했던 남한의 한 대학교 교수도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여성 근로자들은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수입의 약 70%를 국가에 상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북한인권

■ 북한인권재단에 매년 200여억원 출연...민간활동도 지원(3/3,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에 매년 200여억 원을 출연할 것으로 3월 2일 전해졌음.
-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발의 당시 (국회의) 비용 추계를 보면 매년 250억원의 예산 출연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출연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매년 200여억원 규모로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관련 예산을 조사·연구,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에 쓸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 설치로 민·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음.
-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단체(NGO)는 33곳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며 북한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임.

■ 정부 “北인권기록보존소, 민간과 협업 통해 운영”(3/3, 데일리NK)

- 정부가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통일부에 신설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 방향과 관련, “공무원과 전문 인력이 함께 일을 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는 문제를 (정부 혼자서) 100% 맡아서 하기가 힘들다”면서 “민간 기관과 협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중요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해 북한인권 유린 실태 관련 기록이 쌓이고 (이 자료가) 외부세계에 알려지면 북한 내부의 기관·관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권 유린 행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그는 “북한도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반응을 한다”고 지적한 후 “북한이 헌법조항에 ‘여행의 자유’ 등을 삽입한 것도 외부세계를 의식한 결과”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당국에 자극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민간에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기록하는 등 사실상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을 해 왔음.
- 지난 2003년 설립된 NKDB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북한인권침해(과거사) 청산을 주요 목표로 북한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인권 피해자 보호와 정착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음.
- 특히 NKDB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3만 명의 인물 파일, 5만 6000여 건에 이르는 북한인권 침해 관련 파일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및 관리해 왔음.

■ 윤병세 “북한 인권개선 위해 국제사회 행동 나설 때”(3/3,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월 2일 국제사회가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음.
-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현대사회에서 유일무이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이 자국 주민 보호에 실패했다며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책임(R2P)을 국제사회에 요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윤 장관은 특히 곧 채택될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처음으로 깊은 우려를 명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은 희소한 경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군사목적에 전용하고 있다고 개탄했음.
- 윤 장관은 또 “우리는 ‘책임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할 때”라고 역설했음.
- 아울러 유럽의회가 북한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마르주키 다르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당국의 국외 강제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사실을 폭로하며 대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음.

■ 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통과 환영”(3/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안이 3월 2일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었음.
-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통과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 작업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동안 북한인권법 통과를 학수고대했던 인권단체들도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음.
-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둔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음.
- 북한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다루려면 처음부터 법무부가 맡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임.
-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에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남한의 북한인권법을 비난했음.
-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그리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통일부, 北인권법 제정·개성공단 폐쇄에 조직개편 검토(3/4, 연합뉴스)

-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 통일

- 부가 조만간 대대적 조직개편에 들어갈 것으로 3월 4일 전해졌음.
-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도록 했음.
 -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인권범죄에 연루된 북한 고위층을 처벌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애초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09년 폐지된 인도협력국을 부활하고, 인도협력국 산하에 북한인권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올해 초까지 유력하게 검토했음.
 - 인도협력국에는 인도지원과,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도 함께 두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대북 인도지원 전반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음.
 - 이 경우 기존의 ‘2실-2국-1단’ 체제는 ‘2실-3국-1단’ 체제로 바뀌게 됨.
 -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7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서 이러한 방안은 전면 백지화됐음.
 - 정부는 같은 달 10일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중단했고,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선언과 남측인원 추방, 공단 내 자산 동결로 맞섰음.
 - 정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중단에 더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관련 협의도 당분간 보류했고, 북측은 모든 남북대화 채널을 차단했음.
 - 통일부의 조직과 역할 전반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임.
 - 특히,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시 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임.
 -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 시한은 올해 10월 4일까지임.
 - 전례대로라면 시한이 연장됐겠으나, 이번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회복 지원 등 역할 종료와 함께 폐지될 가능성이 크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등도 마찬가지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임.
 - 대북 인도지원과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도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대신,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장기적 통일기반 확충 등 분야와 관련된 조직은 대폭 강화될 수 있음.

3. 탈북자

■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서 ‘탈북자 증언’ 진실 싸고 남북 공방(3/2, 연합뉴스)

-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31차 총회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탈북자 증언의 진실 여부를 둘러싸고 남북한 당국 간에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음.
- 공방을 벌이게 된 실마리는 북한 리수용 외상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그들이 북한을 공격하는 유일한 증거는 탈북자의 진술 뿐이며, 한 사람당 5천 달러 또는 그 이상을 들여 유괴, 납치해 끌고 간 것이 탈북자”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음.
- 이에 대해 김영무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정무 차석대사는 회원국 고위대표들의 기조연설이 끝나고 답변권을 얻어 “북한 수석대표의 기조 발언 가운데 탈북자 증언의 신뢰도를 부인하는 발언은 거짓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탈북자들의 존재 그 자체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대규모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음.
- 그러자 북한 측도 발언권을 얻어 탈북자들은 남한 당국에 의해 납치, 유인된 북한 주민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2차 대전 때 수백만 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25만 명의 위안부를 끌고 간 일본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 김 차석대사는 북한의 이런 발언에 다시 발언권을 얻어 “북한이 납치, 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탈북자는 북한의 인권탄압 결과일 뿐”이라고 강하게 되받아쳤음.
- 그러자 북한은 2차 발언권을 신청해 북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남한 당국의 납치, 유인행위를 중단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유엔 인권이사회 관계자는 전했다.

■ 미 입국 탈북 난민 194명(3/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가 4일 갱신한 난민입국통계(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Office of Admissions)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단 한 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데 그쳤음.

- 미국이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6 회계연도에 수용한 탈북 난민의 수는 이로서 총 8명이며 지난해 11월 5명 그리고 12월과 지난 1월, 2월에 각각 1명씩임.
-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4일 현재까지 총 194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것임.
- 2006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9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후 2007년에 22명, 2008년에 37명, 2009년에 25명 등으로 늘었으며 2010년 8명으로 줄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스무 명 안팎을 유지했음.
- 그러나 2014 회계연도에 다시 8명으로 줄어든 후 2015 회계연도에는 15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했음.
- 한편, 한국의 경우 통일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연말 기준으로 남성 251명, 여성 1천 25명 등 총 1천 276명이 한국에 입국했음.
-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간 2천 500명에서 3천 명 선이었으나,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탈북자 단속 강화로 인한 위험 요소 증가와 도강비 등 탈북 비용 급증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2012년부터 연간 1천 500명대에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임.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북, 지원 모니터링 여건 개선돼”(3/2, 자유아시아방송)
 - 쉘터박스는 3일 북한의 황해남도의 평촌, 황해북도의 은파구, 함경북도의 길주

군, 그리고 함경남도의 금야군에 지원 모니터링, 즉 분배 감시를 하고 지난 2월 초 돌아왔다고 밝혔음.

- 이번에 직접 모니터링 방문을 이끈 쉘터박스의 데이브 레이 사업 운영 담당관은 북한에서 지원품이 정확히 분배되고 잘 이용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 즉 감시하는 것은 특이하면서도 도전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북한에 2012년부터 지원 감시를 다녀본 레이 사업 운영 담당관은 “이전에 비해 (모니터링) 여건이 개선됐다”고 밝혔음.
-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분배 감시에 대한) 접근성과 북한 특유의 지원 수혜 방식에서 오는 문화차를 대북 지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꼽았음.
- 즉, 지원을 받는 지역의 지방 정부 관료나 담당관 등이 지원 기구에 더욱 협조적이어졌으며, 수혜상황이라던가 수혜 결과와 영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는 등 개선된 바들이 있다는 설명임.
-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방문은 나선도 거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으며, 날짜도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때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 쉘터 박스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난해 가뭄과 홍수로 고생한 북한 수재민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겨울 한파용 ‘특수 단열 텐트’를 제작해 제공했으며, 난로, 담요 등도 제공했음.

■ 대북 제재 국면, NGO 지원에 영향?(3/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한 비정부기구는 3월 3일 대북 제재들이 원칙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큰 그림이지만, 최근 중국에서 인도주의 지원품을 구매해 북한으로 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 중국 업체들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눈치라는 설명임.
- 이 기구의 대표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제재와 상관없이 지원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지원을 모니터링하는 미국 북한 전문가는 “현재 미국 관료들이 최근 상원이 통과시킨 미국 제재와 함께 규약(rules and regulations)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대북 지원단체들의 영향의 유무를 말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 한편, 미국의 의료지원 단체인 어메리카어스는 최근 2월 19일 에 의료 구호품을 지원했다면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이 기구는 “어메리카어스가 북한에 배달하는 의약품, 의료 기기들 등에 새롭게 생긴 제한점은 느끼지 못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 다만, 이 단체는 이달과 내달에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국경 지역의 세관 통과에 지연을 겪을 수 있지만, 중국서의 구매나 거래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8. 북한동향

- [北역류 美 대학생(오토 워비어, 21세) 기자회견(2.29)]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하였다’며 ‘美 행정부가 주장하는 北인권문제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구실’이라는 주장과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와 용서를 빌었다’고 강조(2.29, 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